
두만강유역 수해 및 이로 인한 북·중 국경선 재조정 움직임 주목

2016. 12. 2

정낙근 수석연구위원 外 (inkprez21@naver.com)

요 약

1. 北 수해 현황 및 주민상황 / 1
2. 수해지역 복구 현황 / 3
3. 북중 협력의 새로운 시도 :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회의의 의의 / 7
4. 정책적 제언 / 12

보고서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 약 》

- 지난 8월말 제10호 태풍 라이언록 인해 두만강 유역 함경북도 지역의 심각한 수해 발생 및 특히 이로 인한 두만강 유역 북중 국경선의 지형 변화와 관련한 조·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10.25~26)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조선중앙통신(10.25), “회의에서 조·중 국경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이후 국경관계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앞으로 새로운 국경다리들을 건설하며 새 국경통과지점들을 내오는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 ※ 지금까지 양국은 1962년 변계(邊界)조약, 1964년 변계조약에 관한 의정서 등 양자간에 맺은 국경 관련 조약이나 의정서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적이 없고, 또 이번 3차 회의에 앞서 열렸다는 1, 2차 국경공동위도 공개한 바 없음
-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지원물자를 무상 기증한 이후, 조·중 국경공동위 제3차 회의 참가를 명분으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북한정부에 2,000만 위안의 긴급 인도지원물자를 무상으로 제공(중국 상무부, 11.2)
- 또한 주목할 점은 두만강 유역의 수해는 북중 국경지역의 지형 변화 발생 및 이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 압록강-두만강의 섬과 사주(모래톱)의 귀속문제가 북중간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임
- 이에, 양국은 국경공동위 제3차 회의에서 양국간 국경선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중 국경선의 재점검을 모색
 - 압록강 하구의 섬인 황금평이 오랜 퇴적으로 중국과 국경이 맞붙어버려 2011년 북중간 경제특구로 개발을 발표했으나, 현재 담보상태
 - 두만강 하구의 경우도 북한이 경원경제개발구로 지정한 경원군 류다섬리 일부지역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붙어있어, 이 지역의 개발을 중국이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경제개발구로 지정
- 특히, 이번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의 논의내용은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 국경분쟁의 잠재적 불씨가 될 수 있음에 유의

- 지금까지 양국은 1962년 변계(邊界)조약, 1964년 변계조약에 관한 의정서 등 양자간에 맺은 국경 관련 조약이나 의정서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적이 없고, 이번 3차 회의에 앞서 열렸다는 1,2차 국경공동위 또한 공개한 바 없음
- 북중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한 조중변계조약은 1999년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함

○ 정책적 제언

- 함북 두만강지역 일대의 지형 변화 및 이를 이용한 북중간 국경선 재조정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그 일환으로 향후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로 북한에 적극 제시 필요
 - ※ 북한당국은 수해지역에 대한 사회정비를 통하여 휴민트의 고리를 끊어 버리고 중국측과 두만강 접경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탈북을 비롯한 휴민트 활동을 단절하고자 하는 의도도 주목
- 국제사회의 對北 긴급구호 지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공개 필요
 - 국제사회의 수해지역 복구 지원 물자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UN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북한당국에도 요구해야 할 것임
- 두만강지역 자연재해 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
 - 북한 북부지역의 근본적인 자연재해 환경 변화의 문제를 중국러시아,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중간 접경지역 난개발을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
 - 두만강 유역은 이번 수해로 인해 지형 등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이 일대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긴요함
- 북한 북부지역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기후변화 차원의 접근 필요
 - 기존의 교통-물류 차원의 접근에만 국한하지 말고, 환경변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1. 北 수해 현황 및 주민상황

○ 피해 현황

- 8.29~9.2일 사이 10호 태풍 라이언론은 함경북도 경흥군과 부령군에 닷새간 각각 320mm와 290mm의 폭우가 쏟아졌음
- 두만강유역 관측 이래 가장 큰 수해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과 라선시의 일부 지역이 혹심한 피해
- 北(9.14),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는 수백명에 달한다”며 “해방 후 처음 있는 대재앙”임을 강조

○ 주민상황

- 수해민들은 아직 노천에서 생활
 - 10월 중순을 전후해서 밤 기온이 零下로 떨어지면서 凍死者 발생 우려
 - 對北매체 자유북한방송(10.4), 함경북도 수해지역에서 오염된 식수 사용으로 콜레라 환자 급증 보도
- ※ 同매체는 “양강도 혜산시 혜명동과 함경북도 무산, 온성 지역의 주민 및 복구대원(인부)들 속에서 오염된 식수로 인해 대장염과 콜레라 등 급성설사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소식이지만, 최근 수해지역 도로복구 후에 주변 동요를 고려한 때문인지 식량 조달은 원활해 보임
- 다만, 충분한 식량 조달이 되지 않아 이 지역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됨
- 수해로 인한 두만강 유역 지형 변화 발생
- 8.29~9.2 대규모 홍수로 두만강 지역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고, 북·중 접경지역 철도, 다리, 세관 건물 등 파손이 심각한 상황
- 신두만강대교가 9.30일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4차선 중 2차선만 운영되고 일부 구간은 이번 수해로 파손되어 복구 중에 있음
- 화룡시 남평세관은 완전히 물에 잠겨 새롭게 건설해야 할 정도이며, 두만강 일대 북·중 접경통로는 새롭게 복구를 해야 할 사항
- 한편, 이 일대의 탈북 방지를 위한 철조망을 비롯한 중·북간 초소들은 모두 수해로 인해 파손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북·중 두만강 지역 전체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2. 수해지역 복구 현황

- 수해지역 일정과 자재 부족으로 복구가 난항을 보이고 있으며, 북 당국은 보도 매체를 통해서 지역 민심 달래기
 - 노동신문(10.23),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안아온 첫 승전포성,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경흥군 피해지역 살림집 건설 완공”
 - 내나라(10.23), “피해지역 6개 시·군의 살림집 골조공사가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전부 결속, 벽체미장을 비롯한 내외부건축공사가 적극 따라 서고 있다”고 홍보
- 10월末까지 함경북도 수해지역 복구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날림 공사로 인한 건설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 심각
 - 이번 복구공사에서 살림집 건설 등 건설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심각하며, 군부대에서 주택과 아파트 등 건설 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선발하여 수해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시멘트와 철근 등 건축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서둘러 건설을 했고, 또 10월末까지 준공을 마쳐야 해서 안정성 문제와 입주 시점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
- ※ (美 자유아시아방송) 수재민들이 채 완공도 되지 않은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살림집 내부와 외부공사는 끝났으나 창문과 창문틀, 지붕에 석유 기와는 10월 중순에야 중국에서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함

○ 수해지역 외부지원 : 민간단체 및 중국 지원 중심으로 진행

- 민간단체 : 심양 및 단둥 北대표부와 협의, 두만강유역 중국도시에서 咸北으로 이동
 - 외부에서 지원되는 對北 수해 물자 지원은 훈춘, 도문, 용정, 화룡 등지의 중국도시를 경유, 함북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과 라선시 등 6개 지역으로 운송
 - 수해지원물자는 중국 심양 및 단둥지역 北대표부에서 책임자들이 외국 지원 책임자들과 협의 하에 지원물자 확정 → 이를 두만강 지역 연변조선족 자치주까지 동행하여 물자수송을 확인하는 절차 진행
 - 예컨대, 중국 심양의 공장에서 밀가루, 연변지역에서 국수, 채고 의류 등을 구입하여 연변의 대북사업가를 통해 북한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수해물자가 이동
 - ※ 다만 북한에 인도된 물자는 수해지역에서 북한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한 확인 불가
 - 중국 對北업체들이 채고 의류를 싼값에 매입해서 지원 가능한 의류를 분류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북한측 수해세대의 반응은 중국이 중고 의류를 세대에 조금씩 나누어 준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9.29),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지원물자를 무상기증하기로 결정”
 - 중국의 對北 무역업자들은 북한 수해 복구에 중국측의 지원이 상당했으며, 또 중장비 등 수해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여 빠른 수해 복구가 진행됨으로써 북·중간 협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평가
 - 10월부터 북중간 접경지역 관광 재개, 이를 통해 의류와 식료품 등 중국측의 수해지원물자도 전달

※ 이 때문에 유엔대표부, 국제적십자 등 공식적인 수해지원을 제외하고 비공식 수해지원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실정

☞ 그러나, 전달된 수해지원물자의 체계적인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 및 관광지역 등 외부 시선이 보이는 지역의 도로, 건설, 살림집, 아파트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

○ 지난 9월,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월간 단위로 가장 많은 양의 중국産 곡물 수입

- (미국의소리, 11.3) 북한이 9월에 수입한 중국産 쌀은 16,000톤(990만 美달러, 약 113억원)으로, 2012년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뒤 월간 중국産 쌀 수입량으로는 가장 많았음

※ 지난 1~8월까지의 총 쌀 수입량 14,000톤보다 많음

- 쌀을 포함한 전체 곡물 수입량도 9월에 총 18,477톤(미화 1,084만달러 (약 124억원)에 달함

※ 이는 8월 수입량 6,954톤의 2.7배, 올해 1월~8월까지 수입한 총 곡물 수입량 18,027톤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

- 9월 밀가루 수입은 前月보다 15배, 전분은 2배 이상 증가, 콩류는 8월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지만 9월에는 412톤 수입

- 또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7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어난 상황

☞ 지난해 9월에 생산한 쌀의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쌀값 안정 차원에서 대량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수해지역 물가와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음

- 수일 동안 수해지역 쌀 가격 등 물가와 환율이 올라가긴 했으나 집을 잃은 주민들이 수중에 돈도 없었고, 설사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가격에 구매를 꺼리게 되자 수일 후 바로 이전 가격을 유지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설명

☞ 식량 조달 문제는 북한정권의 절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 중국 상무부(11.2), 북한의 요청에 따라 중국정부가 북한정부에 2,000만 위안의 긴급 인도지원물자를 무상으로 제공

- 중국정부가 함경북도 지역에서 태풍 '라이언록'으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겪는 북한에 2,000만 위안(약 33억 9,300만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지원물자는 북한의 긴급 재난구조와 피해복구 및 재건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

- 그동안 중국은 적십자사를 통해 수해지원금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무상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

- 지난 9월 중국정부의 지원물자 무상기증 이후 이번에는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서 북한 핵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상그룹(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규정 위반)과 향후 진행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별개로 접근

- 이처럼 중국은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을 별개로 접근, 비난을 차단하고 중국의 실리를 취하는 형태를 갖추으로써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3. 북·중 협력의 새로운 시도

: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의 의의

- 두만강 유역의 수해로 인해 북·중 국경지역의 지형 변화가 발생, 이로 인한 국경선 갈등 가능성에 대비한 북·중 국경선 재점검 모색
- 북·중 접경지역 압록강-두만강의 섬과 사주(모래톱)가 지속적으로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 지역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압록강 하구의 섬인 황금평이 오랜 퇴적으로 중국과 국경이 맞붙어버려 2011년 북·중간 경제특구로 개발을 발표했으나 현재 답보상태
- 두만강 하구의 경우도 북한이 경원경제개발구로 지정한 경원군 류다섬리 일부지역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어 붙어있어, 이 지역을 중국이 개발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경제개발구로 지정

○ 中외교부 고위급이 5차 북핵 실험 후 처음 방북(10.24~27)하여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평양 개최

- 중국 고위급인사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의 방북이 주목되며, 그 이유는 올 2월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에 이어 8개월만이자 북한 5차 핵실험(9.9) 이후 처음이기 때문

※ 차관급인 류부부장은 2014년 2월 남북한을 연쇄적으로 방문한 바 있음

- 특히 핵개발과 제재로 인한 양국관계 냉각에도 북·중 양국이 실무적 교류를 계속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특히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6주년 기념일인 10월 25일에 맞춰 방북한 것도 예사롭지 않음

※ 북한과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평양의 북·중 우의탑에 류전민 부부장이 화환을 바쳤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이 대외적으로 밝힌 류전민 부부장의 북한방문의 공식적 목적은 조·중 국경공동위원회(중국은 ‘중조변계연합위원회’라고 함) 제3차 회의 참가

※ 북·중 양국은 1962년 북·중 국경조약과 1964년 국경의정서를 체결, 국경 하천인 두만강·압록강의 섬들과 백두산의 귀속 문제 등을 획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 외교부(10.25), “중조 국경공동위원회 중국측 수석대표로 24~27일 대표단을 인솔해 박명국 조선(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제3차 회의를 공동 주관, 중조 국경공동위는 2009년 중조 국경관리제도의 집행기구가 됐으며 중조 국경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상과 해결을 담당,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언급

※ 중·조 국경공동위원회는 1986년 체결됐으나 아직 공개된 적 없는 북·중 국경안전질서의정서(국경지역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의정서)에 근거해 설치한 기구로 판단됨

○ 10.25~26 중조변계연합위원회 제3차 회의 내용(신화통신, 10.26)

- 양국의 공안, 환경보호, 교통, 수리, 국방, 통상구 등 부문 및 관련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가
- 회의에서 양측은 연합위원회 제2차 회의 이후 '중조변계관리제도협정' 집행정황을 회고·총결, 변경지역의 집행(執法)과 관리통제, 경계선지역 인프라 건설, 변경지역 협력과 통상구 개방 등 변경 관련 사무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공동인식을 달성
- 북한측은 중국측이 두만강 홍수재난구조와 재난 후 재건과정 중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양측은 계속하여 연합위원회 기제를 잘 이용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경지역의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잘 수호해야 한다고 밝힘
- 양측은 양국관계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 ※ 조선중앙통신(10.25), “회의에서 조·중 국경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이후 국경관계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앞으로 새로운 국경다리들을 건설하며 새 국경통과지점들을 내오는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 이번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의 논의내용은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 국경분쟁의 잠재적 불씨가 될 우려

- 지금까지 양국은 1962년 변계(邊界)조약, 1964년 변계조약에 관한 의정서

등 양자간에 맺은 국경 관련 조약이나 의정서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적이 없고, 또 이번 3차 회의에 앞서 열렸다는 1,2차 국경공동위도 공개한 바 없음

- 북·중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한 조중변계조약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개요

-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
- 1962.10.12, 평양에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중조변계조약’을 체결, 압록강·두만강 상의 섬과 사주의 분할 근거 제시
- 1964.3.20, 베이징에서 北 외무상 박성철과 中 외교부장 천이(陳毅)가 서명하여 ‘중조변계의정서’를 교환, 백두산 천지의 국경 확정
 - 총 5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백두산과 天池, 압록강-두만강, 그리고 서해 영해의 국경선을 명확히 적고 있는데,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鞍部, 안장처럼 들어간 부분)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천지의 54.5%는 북한, 45.5%는 중국에 속함
 - 조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砂洲, 모래톱)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북한은 264개의 섬과 사주(총면적 87.73km²)에 대해, 중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총면적 14.93km²)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
 - 북한 소유 압록강 섬은 127개(74.24km²), 중국 소유 압록강 섬은 78개(4.06km²)이며, 북한 소유 두만강 섬은 137개(13.49km²), 중국 소유 두만강 섬은 109개(10.87km²)로, 면적으로 볼 때 압록강 섬의 94.8%, 두만강 섬의 55.4%가 북한 영토이며, 전체 섬의 85.5%에 달하는 87.73km²가 북한 영토, 14.5%에 달하는 14.93km²가 중국 영토로 되어 있음

-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 조중변계조약을 구실로 조선족을 박해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1972년에는 저우언라이가 미국 닉슨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중 국경문제를 설명하였고, 1974년 6월 중국 吉林省 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 편인(編印)의 『중조, 중소, 중몽 유관 조약, 협정, 의정서 회편』이 발간
- 조중변계조약은 中蘇분쟁, 티베트와 中印분쟁, 朝中동맹조약과 朝蘇동맹조약 등 사회주의권의 분쟁, 그리고 조선족의 북한 귀화, 고구려사 등의 역사문제 등을 배경으로 진행, 따라서 한반도 분단 해체과정에서 고구려사문제 등의 역사논쟁과 더불어, 중국은 특히 1909년 9월 淸과 일본 사이에 맺은 간도협약(두만강 중한 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에 기반한 1964년 중조변계의정서는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음
- 2000년에 들어서야 1997년 중국에서 발간된 ‘저우언라이 연보(周恩來 年譜) 1949~76와 1995년에 발간된 ‘진의(陳毅)연보’ 등을 통해 조중변계조약이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됐으며,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 1964년 3월 20일에 중조변계의정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북한과 중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한 조중변계조약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정책적 제언

- 함북 두만강 지역 일대의 수해로 인한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이 지역의 수해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탈북자 3만명 시대 상당수 탈북자들은 이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으며, 이들 탈북자의 대북 송금을 비롯한 휴민트 활동으로 대북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 왔음에 유의
 - 북한당국은 수해지역에 대한 사회정비를 통하여 휴민트 고리를 끊어 버리고 중국측과 두만강 접경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탈북을 비롯한 휴민트 활동을 단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對北 긴급구호 지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공개 필요
 - 국제사회의 수해지역 복구 지원 물자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UN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북한당국에도 요구해야 할 것임
 - 북중 두만강 지역을 비롯하여 북중러 두만강 일대의 자연재해 발생時 이를 북중 및 북중러의 협력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긴급구호 지원이 있었듯이 UN 차원에서 두만강 지역의 인프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두만강지역 자연재해 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

- 북한 북부지역의 근본적인 자연재해 환경 변화의 문제를 중국·러시아,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중간 접경지역 난개발을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
- 두만강 유역은 이번 수해로 인해 지형 등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이 일대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긴요함
- 두만강 유역을 북·중 접경지역으로 단순히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함
- 통일 이전이든 통일 이후든 두만강 유역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토건설 디자인이 필요함

○ 북한 북부지역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동북아 기후변화 차원의 접근 필요

- 동북아 기후변화 차원에서 북·중·러 접경지역의 구조적 접근 판단 필요
- 기존의 교통·물류 차원으로서의 접근에만 국한하지 말고, 환경변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또한 북극해 항로의 주요 라인으로서 기후변화를 접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의 주도적인 참여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번 두만강유역 수해로 인한 지형 변화를 이용한 북중간 국경선 재조정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로 북한에 적극 제시 필요